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한국에 있어서 근대자본주의의 발전과 4월혁명

최 단 옥

(정경분과위원장, 인천대 교수)

I. 자본주의의 라이프 사이클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사회구조(생산양식)는 생성하여 쇠퇴,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신의 한 생애를 갖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도 그 발생으로부터 쇠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몇 단계의 계기적인 과정을 거쳐 전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여러 나라의 국민경제가 발달해 온 경로를 정리해 보면 각 단계를 경과하는 기간의 길이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비슷한 형태의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 도달한 것이다. 그 발전단계에서 나타난 진행 방향은 ①자본제적 생산관계(산업자본의 맹아)의 생성->②시민혁명->③산업혁명->④산업자본주의->⑤독점자본주의에 이르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대략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편의상 구분해 본 이러한 단계들이 서로 시차가 크지 않아 중복 진행되는 나라가 있고, 또는 어떤 단계가 비교적 희미하거나 짧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언뜻 보기에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 일거에 자본주의를 완성한 경우라고 잘못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예외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국민경제는 대개 이 중 어느 한 발전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국의 당면하고 있는 현실 경제 문제의 본질은 그 나라가 과거의 과정을 어떻게 지내왔으며 현재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느냐에 따라 각각 독특한 성격의 것으로 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II. 한국 자본주의의 생성

대체로 18세기 말경부터 한국의 기존 봉건체제가 모순을 현저하게 드러내면서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다. 개항 무렵부터 급속하게 성장하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는 1882년경 구미 제국과의 통상 협약 체결 붐과 함께 외국문물 유입에 자극 받아 더욱 활발해졌다. 새로운 생산기술과 새로운 상품 영역을 도입, 개발하면서 산업자본 성격의 특유한 경쟁과 친화력으로 그들의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1894년의 역사적인 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은 이들 계층이 주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들의 성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전 정도로 보아 시민혁명의 준비기에 들어섰다는 뚜렷한 표시라 할 수 있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산업 침투 작업을 본격화하던 1904년 이후에도 눈앞에 다가서는 불공정 경쟁 환경을 무릅쓰고 이들 생산자층은 메리야스, 양말, 신발 등 신상품 기술을 도입하면서 경영확대를 도모하고 나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시민혁명의 성취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외국의 예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III. 시민혁명의 성취

산업자본의 초기 형태인 중산적 생산층은 봉건세력의 억압 속에서도 계속 투쟁하며 성장해 오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마침내 봉건세력을 압도할 만한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봉건세력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세력의 역전 현상은 두 경제 질서의 사회 지배력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동안의 봉건적 제도가 무력화되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 합당한 새로운 사회질서와 사회제도가 자리잡게 된다. 이것이 시민혁명 과정이다. 이 시민혁명 과정은 신규 두 개의 경제 질서 사이에서 전개되는 세력 변화의 양상에 따라 외형상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극단의 대결 상태까지 버티다가 단기간 내에 격렬한 변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한꺼번에 폭발해 결판이 나기도 하고(프랑스) 몇 번에 걸쳐 나누어 성취되기도 한다(영국, 독일). 이것이 성취되면 그 사회를 자본주의로 진입한 초기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민혁명 과정은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다.

우선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내부에서 성숙되고 있던 시민혁명의 준비 과정이

일찍이 외세에 의하여 중단되고 간섭받은 일이다. 1894년의 농민전쟁으로 적어도 기존의 정권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외세가 개입하여 그 정권을 억지로 유지 시킴으로써 개혁의 담당자 역할도 유지시켰다. 그리고 1910년에 식민지가 되면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개혁조치가 일본의 손으로 실행됨으로써 그 후에 있을 시민혁명의 정상적인 개혁 방향을 왜곡시켜 버렸다. 이때 일단 다시 고정된 지주·소작이란 봉건적 토지 경작 관행은 이번 세기의 전체를 통하여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거기에 식민지정책이 우리의 산업자본 억체에 혹독하게 가해진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상적 경로의 시민혁명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제도개혁의 순서와 강도가 혼란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시민혁명은 해방 후 15년이 지나 시민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해방된 시점에서 볼 때, 비록 토지소유권 제도는 근대화되어 있다 하나 경영방식은 봉건적 소작제가 오히려 식민지 되기 이전보다 더 심화되어 있었고, 자본주의적 공업생산자 층도 그 동안 억제되어 온 결과 사회에서의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전기적 상업자본의 독무대처럼 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토지에 대하여는 미군정과 신생 독립정부가 비로소 적산 불하와 농지개혁을 통하여 농민소유라는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의존해 있던 봉건적 경영 방식과 관습에 얽힌 모순은 1960년 4월의 시민혁명으로 귀결된 것이다.

4월혁명 이후 변혁이 모든 부분에서 나타났다. 내부적 생산력 발달에 힘입어 정상적 방향으로 성취된 변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듬해에 군사정변으로 정부가 바뀌었어도 이 변혁방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1996년 역사학대회 발표 논문 발췌)

사월혁명회보 제44호(1996.6)